

## 일본의 극우화와 동북아의 평화 — 한국의 선택

서승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교 법학부 교수, 국제지역연구소 부소장

### I. 일본의 극우화와 미국의 동북아정책

심포지움 주최자로부터 처음 받은 발표제목은 일본의 '우경화'와 동북아의 평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일본의 정치상황을 놓고 우경화라고 부르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현재 일본은 극우 비정상국가로 치닫고 있다.

구엇을 가지고 극우라고 하는가? 무엇보다도 일본정치가 민주적인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정치와 여론이 일색화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난 5월 노무현대통령 방일 날에 일본사회의 전쟁동원을 법제화한 유사관련법이 90%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의결되었으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코이즈미의 압도적인 승리와 더불어, 이라크 파병도 거의 저항 없이 결정되었다. 11월초 중의원선거를 앞두고 코이즈미는 일본헌법 개정, 즉 군사력 소지와 전쟁을 금하고 있는 일본국 헌법 제9조를 바꾸고 천황을 국가원수로 복권시킬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본은 바야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일대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20세기의 광기에서 인류가 제정신을 차릴 기회가 두 번 있었다고 한다. 두 번의 기회란 2차대전 후와 냉전 종식 후를 말한다. 사람이란 큰 코 다치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는 법이다. 세계대전과 냉전이라는 엄청난 참화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릴 듯했으나, 인류는 역사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오늘날도 지구상에 평화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의 한반도 위기의 애당초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는 나치에 대한 철저한 청산,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과 같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기리며 보편화하려는 성과를 남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종전 이후 곧바로 이어진 냉전은 동서 양 진영의 극심한 대립을 가져왔으며, 전승 5개국의 통치에 의한 새로운 세계 안전보장기구로 예정되어 있었던 유엔은 무력화되거나 미소 양 패권국의 도구로 전락했다. 특히 미국은 극동전략을 변경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를 위해 일본의 동아시아에서의 범죄를 면제해주었다. 그 결과 파시즘 추축의 쌍벽이던 일본은 독일과 매우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일본사람들의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과대 평가하여, 일본 본토공략의 희생을 최소화하려 했던 미국은 전범자인 천황을 면책했다. 또한 미국은 극동에 있어서 소련의 세력 팽창과 중국대륙의 공산

화에 대항하기 위해, A급 전범을 석방하여 일본군국주의의 해체를 중지하였다. 이로써 일본에서는 과거의 오욕에 찬 역사로부터의 단절이 실패하는 불행한 결과가 빚어졌다.

이른바 ‘역코스’의 시작으로 ‘레드 퍼지’가 진행되어, 조선인연맹, 공산당 등 일부 정당과 결사가 금지되었으며, 조선전쟁의 시작과 더불어 군수산업이 부활되었고, ‘자위대’의 이름으로 일본군이 부활했다. 조선전쟁의 와중에 일본의 미군점령을 종식시키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미일안보조약, 화(대만)일우호조약을 끼고 체결되어 7년만에 일본이 ‘독립’되었다. 이 일련의 조약으로 ‘독립’일본은 미국의 극동반공전초기지로 냉전구조 속에 확실하게 위치 메김이 되었다.

미군점령을 겨우 벗어난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무조건 미국이 시키는 대로하기를 요체로 삼고, 헌법 제9조를 내걸어 대내적·주관적으로는 평화주의를 취했지만,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냉전시대 내내 가장 막강한 군사기지로서의 구실을 다하였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로 대표되는 일본자민당 주류파의 기본정책은 대미의존으로 군사비를 경감하여, 동북아 인근 국가들에 대한 배상이나 관계개선 등의 외교안보비용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루는 이른바 ‘경무장 경제성장 제일주의’였다. 그러나 동시에 천황제 국가라는 연속성을 지니는 일본에서 ‘강국’ 일본의 부흥을 꿈꾸는 과거회귀본능이 끈질기게 존재해왔다. 625이래, 아니 명치유신이래, 한반도는 일본 ‘유사사태론’의 구실이 되어, ‘조선반도(부산)적기론’ 또는 ‘조선반도유사론’이 일본의 군사화의 정당화론으로 외쳐지기도 했다.

## II. 일본의 한반도위기 재생산구조

1990년에 들어서 소련의 일방적인 와해라는 냉전구조의 붕괴는 미국에게 향후 세계에 대한 전쟁과 평화라는 넓은 선택지를 부여했다. 그러나 미국은 홀로된 초강대국의 입지를 세계평화나,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 민주, 인권’의 실현을 위해 활용하기보다는 국익의 이름으로 군산복합체의 이익과 협소한 애국주의를 위해 그 기회를 소비를 하였다. 그것은 우선 제일차 이라크전쟁의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냉전 후에도 군사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은 소련 대신 새로운 적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었으므로, ‘불량국가’ ‘테러지원국가’ ‘핵 선제공격대상국가’ ‘악의 추축’ 등의 말을 만들어내며 끊임없는 전쟁위기를 재생산해왔다. 이에 편승한 일본은 1980년대의 공전의 호황을 배경으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여 ‘보통국가론’이나, 유엔상임이사국진입<sup>1)</sup>론이 풍미하는 대국주의의식을 분명히 했으며, 미국을 추종하면서 군사확장과 전쟁, 국민동원, 사회통제의 입법화에 부심 하였다.

전후 일본의 최대의 적국인 소련의 붕괴 이후에 오히려 미일안보조약가이드라인 개정 및 동 조약의 재해석, 주변사태법, 국기국가법, 주민기본대장법, 도청법, 헌법조사회법, 반테러지원법, 이라크전쟁지지, 유사관련법, 이라크지원특별조치법 등의 입법이 제정되어 급속한 군사화, 과거회귀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평화헌법’은 이제 어떤 편법을 동

1) 이에 대해서는 1998년 김대중 방일 시에 우리나라의 비상임이사국진입과 맞바꾸기로 지지하기로 밀약을 했다고 한다. 상세하게는 출처 『韓日新時代』論考, 『立命館法學』第267號 2000 참조.

원하여 해석하더라도 그 모순을 미봉할 수 없게 되었고, 앞으로 2년 후인 2005년에는 천황 국가원수, 군의 합법화와 국민의 국방의무, 히노마루 키미가요의 헌법명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 코이즈미 정권의 선거공약이 되기에 이르렀다.

대저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탱케 해 온 것은 첫째, 다시는 미국에 대한 일본의 도전을 용서치 않겠다는 미국의 일본통제의지, 둘째, 일본의 진보운동 등 호헌세력의 역량, 셋째, 동북아 이웃나라들의 군국주의 부활 경계라고 한다. 그러나 첫째, 미국이 일본의 독자 (핵)무장이나 자주적인 군대를 인정치 않으려 하고 있어서 여전히 일본 군사대국화에 췌기를 막는 최대의 요인으로 남아 있으나, 적어도 동북아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서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는 미국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과 가까웠던 사민당이 작년 코이즈미 평양방문 이후에 몰아친 ‘납치’문제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집중적인 타격을 받는 등 호헌세력의 몰락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있다. 끝으로 이웃나라의 비판, 견제에 대해서 보면 한국은 1998년의 김대중 방일 이래 실질적으로 기능을 상실했으며, 중국은 후진따오 정권 탄생이래 실리주의적인 성향을 더욱더 분명히 드러냄으로서 견제기능을 거의 상실해가고 있다. 이에 코이즈미는 이제 이웃나라들의 비판에도 아랑 곳 없이 야스쿠니 신사사참배 의지를 공언하면서 서슴없이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세계 최초의 유일 피폭국가라는 것이 비핵 3원칙을 내거는 평화국으로서의 전후 일본의 아이덴티티였을 터인데, 북핵 위협을 구실로 그 확고부동의 철칙은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작년부터 후쿠다(福田) 관방장관, 아베(安部) 관방부장관 등 정권의 중추들이 핵합법론을 펴는가하면 주간지, 우익신문 등에서는 핵무장론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으며, 이시하라(石原)동경도지사나 이시바(石破)방위청장관등은 대북 선제공격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일본이 동아시아의 현실적인 군사위협으로 등장하게 되었음은 이제 세계 언론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기도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냉전붕괴이후, 미국은 패권의 유지를 위해 위기를 재생산해 왔다. 일본은 그러한 미국에 편승하여 동북아의 위기를 부추겨 왔다. 그 과정에서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고, 북한 때리기에 광분을 해왔다. 작년 9월의 북일 공동선언에서 ‘비정상적 시대의 문제는 정상화 속에서 해결’하자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에 동의를 했으면서도 코이즈미는 평양에 머물 때부터 외교적인 예의를 무시하는 비정상성을 드러내 보였고, 돌아가서 ‘납치’ ‘핵’문제를 핑계삼아 제일 조선인 박해와 대북전쟁론으로 치닫는 비정상성을 뚜렷이 드러냈다.

### Ⅲ. 비정상국가 일본

일본의 비정상성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1) 천황제의 유지: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자의 부재. 일본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 2) 보편적 가치관과 역사인식의 결여: 가해자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식만이 강조되어 왔다. 예를 들어 남경대학살이 없었다고 하는 자는 세계에서 일본 외에는 없으며, 이른바 ‘납치’문제에서도 일본의 피해사실만이 강조되고 있다.
- 3) 외교안보정책의 자주성 결여, 대미 추종·편승론이 지배.
- 4) 일본은 이웃 나라들에게 끼친 가해사실은 외면할 뿐 아니라, 일본제국과 그 후 일본 정부가 자국민에 가한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사실조사, 사죄, 명예회복,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오지 않았다. 예, 치안유지법, 총동원법, 레드 퍼지
- 5) 조선사람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와 차별로 대표되는 민족·인종차별과 배외주의

이러한 일본의 비정상성은 긴 냉전시대를 통해 대미 종속을 대가로 얻은 미국의 비호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역사에 대한 성찰의 부재, 자립/자주의지의 부재, 이웃나라나 자국민과의 화해의 부재라는 상황에서도 일본은 미국에 의존하여 생존해왔다. 한편에서는 듣기는 좋으나 책임성이 없는 담론적인 평화주의, 인도주의, 국제주의가, 다른 한편에서는 방자한 민족/인종 차별주의와 일본군국주의 찬양이라는 빛과 그들이 표리일체가 되어 살아왔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으로 일컬어지는 거품 붕괴이후의 긴 불황 속에서 일본국민은 마치 바이마르 공화국 붕괴시기의 독일사람들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여 신경이 날카로워짐으로서 그나마 내향적인 평화주의마저도 빛을 잃고, ‘생활보수주의’라는 더욱더 공격적이고 파괴주의적인 배외주의, 이기주의를 키워왔다. 독일에서는 유대인 공격이 나치의 선동에 의해 소시민들의 좌절감과 분노의 배출구가 되었는데, 1990년대 이후 북한 및 재일조선인이 일본사람의 가학취미적인 공격의 표적이 되어 왔다<sup>2)</sup>.

#### IV. ‘동북아시아’와 일본

일본 전후 외교의 3대 기둥은 미국중시, 유엔중시, 아시아중시(멸시)라고 한다. 그러나 유엔 중시란 미국이 만들어준 외교무대와 미국이 만들어 준 헌법의 걸치레인 유엔의 중요성을 말하며, 아시아 중시란 경제시장과 반공동맹으로서의 중요성을 말한다. 그러나 그나마 일본은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여론의 반대와 유엔 결의를 거치지 않고 제2차 이라크전쟁을 시작한 미국의 명백한 국제법위반 사실을 용인, 지지함으로써 그들이 내세우는 외교의 3대 기둥이 기실 미국중시 이외에는 허울이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미의존이 언제까지나 일본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도 없고, 대미관계에서 일본정부의 너무나 굴종적인 모습에 ‘혐미’감정도 만연하기 시작했으며, ‘편승론’과 ‘할 수 없지론’만으로 대미맹종을 호도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현재 일본은 정치 경제적으로 꽤 막혀있는 상태이므로 대중들의 현실 탈피에 대한 정서는 강하다. 구조개혁의 구호를 내거는 포퓰리스트 코이즈미가 많은 실책을 거듭하면서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코이즈미 방북<sup>3)</sup>은 매우 희귀한 일본외교의 독자적인 행보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2) ‘재일 조선인 문제,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아웃사이드』, 13호, 2003 참조.

3) 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筆者 他 編, 『東北アジア時代への提言—戦争の危機を平和構築へ』, 平凡社, 2003

북미관계가 정체중인 틈을 타서 일본 외교의 마지막 과제를 일본에게는 뜻밖의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했기 때문이다. 또한 종전에는 전혀 관여할 틈이 없었던 동북아 국제관계, 조선반도 문제에 일본이 발언권을 얻게 된 점도 평가할 수 있다. 고이즈미 방북을 일본 경제계가 가장 강력하게 민 것도 일본경제불황의 탈출구를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으로 생기는 유효수요에 기대해서이지만, 나아가 동북아의 엄청난 자원과 잠재력이 갖는 미래의 가능성에 크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때 마침 노무현 새 정권이 ‘동북아시아시대’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등장했다. 이 말이 함의하는 바는 첫째, 동북아 공동의 미래를 위한 평화 안보 대화구도의 마련, 둘째, 무한한 가능성을 갖는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발전, 셋째, 그것을 위해 미국에 의한 지역 분단을 극복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상대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냉전구도의 붕괴, ‘일방주의’라는 정책에서 미국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듯이, 공공재로서의 미국의 역할의 종언, 동북아 여러 지역의 괄목할만한 상호경제결합의 발전 등의 조건이 동북아시아에 현실성을 띠게 했다. 일본의 식자 중에서도 일본의 살길은 동북아시아의 공조에 있다는 인식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선동적인 반북 캠페인을 하는 부류들에게는 미래의 구상과 동북아 국제정치에 대한 책임윤리가 전혀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일본은 전쟁이나 평화냐, 미국이나 아시아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결론은 명백하다. 동아시아시대에 일본의 살길은 있고, 동북아시아대를 열기 위해 일본을 반드시 참여시켜 동아시아와 일본의 화해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 V. 한국사회의 일본인식

일본에서는 한국을 반일주의의 나라로 생각하여, 반일적인 한국을 몹시 혐오하고 비판해 왔다. 물론 맹목적인 배외주의나 반일론이 긍정될 수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침략과 식민지배의 피해자가 된 민족에게 정당한 비판은 한일 양국의 진정한 탈식민지를 위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진정 한국은 반일의 나라인가? 일본군 장교출신자가 오랫동안 대통령으로 군림한 나라, 술을 마시면 일본 칼을 휘두르고 일본군가를 고성방가한 대통령이 있었던 나라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정치가, 대중 앞에서 일본어 능력을 피력하여 으쓱한 대통령이 있었지 않는가? 일본대중문화가 금지된 시대에서도 일본의 대중잡지 주간지 만화가 범람하고, 다투어 일제를 선호하고 일본 TV를 관람한 국민이 아닌가?

하방 후 친일세력이 정권의 중추를 장악한 한국현대사의 비극적인 비비꼬인 성격에 의해, 한국에서는 지배자는 (친미) 친일, 피지배자는 반일이라는 괴리가 발생하였다. 그것이 역대한국정부의 걸으로 반일, 속으로 친일이라는 대일 정책의 이중성의 배경으로 되어 있다. 역대 정치가들은 자신의 알리바이로서 친일성을 은폐하거나, 대중동원을 하는 수단으로 반일을 이용해왔다. 광범한 시장경제에 지배받은 사회에서 대중들 사이에서도 걸으로

---

년을 참조.

반일, 속으로는 친일이라는 분열증적인 성격이 조성되어 왔다. 일부 지식인만이 반일 외치고 대중은 따로 노는 구도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그나마 표면상의 반일도 이제는 자취를 감추어 가는 새로운 현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16일 EBS방송에서 ‘일본의 군사화’라는 테마로 토론 프로그가 있어서 출연했다. 요즘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일본군사화문제를 다루니 특별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국방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뿐만 아니라, 일반대학교의 교수들도 그 주된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일본은 전후에 미국을 추종하면서 실리를 추구해왔는데, 요즘 한국은 반미나 자주니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다. 미군철수 하면 국방비용은 누가 감당할거냐.” 이것은 그 전날에 발표된 노 대통령의 8·15 자주국방연설을 비판한 것이기는 했으나, 친미, 친일의 공공연한 입장표명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의 군사화 군국주의회귀에 대해서도 “일본은 민주국가인데, 한국에서는 공연히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네 한다. 다 무식한 소리다. 일본의 개헌, 자위대의 합법적인 군대로의 등장에 대해 말이 많은데 한국을 포함하는 모든 나라가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만이 군대를 가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개헌이야 자기들의 법에 따라하는데 왈가왈부 할 수가 있느냐”는 식의 매우 노골적인 이야기였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를 진짜 모르고 하는 소리다.

## VI. 민족공조를 일본에서

지난 8월에 6자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남치문제를 걸고 일본이 적극 방해하려는 자세도 있고해서, 그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라크의 베트남화에 따라 부시에게는 한반도에서 또 하나의 전선을 여는 여력이 없다는 견해가 유력해짐으로써, 일단 전쟁의 위기는 잠시 멈춰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지고 보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남의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존을 인정하라는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반세기전에 휴전된 조선전쟁을 완전히 끝내자는 것이다. 전쟁이라는 선택이 주변의 어느 나라에게도 없다면, 그런 요구는 별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실재는 문제가 꼬이고 있다. 문제는 미국에게는 평화와 화해의 방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기들이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6자 회담을 지지해 왔으나, 남치문제를 앞세워 역시 문제해결에 부정적인 역할밖에 하지 않을 것이므로, 북한에서는 일본의 배제를 주장하고있다.

그러한 고약한 일본을 동북아시아에 동참케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일본의 군사주의 부활을 막는 구실을 맡아 온 우리나라와 우리정부가 일본에 대해 바른 말을 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방일시, 당시 최상룡 특별 수행원(후에 주일대사)이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일 연설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에 대해서는 언급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일본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소학교 교과서에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비굴한 태도인가!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사람에게도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금년

6월의 노무현 방일시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일본사람에게 한반도에서 냉전/분단시대가 끝나고 통일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인식케 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상대라는 인식을 바꾸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민족자존의 문제와도 관계되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의 분단 냉전 시대적인 대북관은 남북화해협력에 커다란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6월 노무현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10개 항목의 정책건의문을 올린 바가 있다. 거기서 핵심적인 건의는 민족공조를 일본에서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사람들의 박해를 받는 조선학교 어린이를 손수 찾아가 격려를 하고, 조총련 인사도 招宴하여, 일본사람에게 북한 및 조선동포들에 대한 탄압에 한국정부는 무관심하지 않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본을 ‘납치광란’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나라 사람들이 이성과 인간주의의 정신을 가지게 하는 방법은 민족 공조를 일본사람에게 실감케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에서 천명되는 민족화해의 메시지는 일본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남북으로, 세계로 향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유감스럽게도 나의 건의는 실현되지 않아, 일본정부는 노대통령 방문날에 유사관련법을 제정했으며, 우리나라의 승인을 받았다는 식으로 노대통령 귀국 후 바로 만경봉호 사건 등 대북 제재조치가 시행되어 이른바 ‘압력과 대화’정책이라는 협박이 강행되었다. 게다가 이라크파병법상정 등 단숨에 호전적인 방향으로 선회했다. 일본우익은 재일조선학생에 대한 박해는 물론 조총련에 대한 방화, 폭발물 설치, 총격 등의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라크전쟁에는 80%가 반대한 일본인들이지만 그들은 대북 강경봉쇄정책에 대해서는 7-80%가 지지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화 반동화를 막고 남북화해/협력, 동아시아시대에 일본을 동참케 하기 위해 일본사람들의 북한문제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싶다. 그러기에 재일동포문제, 일본에서의 북한문제가 중요하다. 대북 평화/번영정책이 38선 뿐 아니라, 현해탄을 건너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록: 서승 교수가 2003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하여 청와대에 제출한 건의서>

## 노무현 대통령 방일에 대한 정책건의 - 일본에서 동북아 평화 번영의 메시지를

노무현대통령 각하의 방일이 방미와 같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아름다운 성과를 거두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1. 일본에서 평화 번영의 '동북아시아' 선포

대북 '한미일공조'나 김대중 전대통령의 '미래지향의 한일관계'의 확인 만이라면 대통령 방일의 새로운 의미는 없다. 협조적 안보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격조 높고 대담한 '동북아시아 선언'의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가장 큰 핵심은 '평화'원칙의 고수 표명이며,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해 일본의 역할이 불가피함을 상기시킨다. 평화의 가치는 아직도 일본대중 속에 뿌리 깊이 남아 있으므로 일본인의 환영을 받아, 평화의 대통령으로서 깊은 인상을 줄 것이다.

### 2. '동북아시아 대화기구' 창설의 제안

중전의 한일공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못하고 실패했다. '동북아시아'를 열기 위한 관민 두 차원에서 협조적 안보 개념을 기조로 한 안보, 경제, 문화교류 등의 다각적 기능을 지니는 '동북아시아 대화기구'의 창설을 제의하여, 남북중일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자리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대화와 동시에 각 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동북아 젊은이들의 대화기구의 창설도 제안하여야 한다.

### 3. '3+3 동북아 비핵·불가침지대조약'의 제안

남북일본의 비핵지대선언을 미국, 중국, 러시아가 보장하는 이른바 '3+3동북아 비핵지대 선언'은 이미 제안된 바가 있다. '3+3 비핵지대 선언'에 더해 상호불가침·무력 불사용, 주권존중, 상호호혜, 대량살상무기금지·비확산을 패키지로 한 조약을 제안한다. 이것을 개방적 국제조약으로 제안하고 세계의 국제기구 및 각국이 지지승인을 유도한다.

코이즈미 총리의 방미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추가조치'보다 한 단계 높은, 무력사용을 시야에 넣은 대북제재 쪽으로 무게를 실은 '강경한 조치'를 표명하면서 실질적인 대북 제재 및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대통령 방일에서 미일합의를 명시적으로 지지하거나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것은 일본의 한 단계 강한 조치의 승인을 의미하므로, '추가조치'에서 평화 쪽에 무게를 실으려 했던 우리정부의 의도와 위배되고, 북한의 고립감을 심화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미일정상의 '강경한 조치' 인정은 절대 피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



정부가 합의한 수준을 지켜야 할 것이다.

#### 4. 민족화해정책의 천명

2항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우리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은 일관된 기초임을 일본사회에 널리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민족화해의 실천으로 일본에 머무는 동안에 대통령 면담 자리에 民團계 인사와 더불어 총련(재일본 조선인연합회) 대표 등도 초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족화해 메시지는 재일동포 뿐만 아니라 북한 일본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자신이나 영부인의 조선학교 어린이 방문도 고려되어야 한다.

#### 5. 북일 정상화회담의 개시촉구와 우리정부의 지원 표명

평화적으로 북한핵·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일 정상화회담의 즉각개시가 긴요함을 상기시키고, 그 성공을 위해 우리정부가 백방으로 지원할 것을 표명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대북 전쟁론 또는 강경론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 있는 ‘납치문제’에 대해 가족의 상봉이나 재결합을 위해 우리정부가 적극 중개할 것을 표명한다.

#### 6. 재일동포 교육권 및 인권옹호 요청

4항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에게 영어사용 국제학교와 민족학교와의 차별을 폐지하여 민족교육권의 인정을 촉구한다. 또한 납치문제 등을 빌미로 하는 총련계 동포들에 대한 박해와 인권침해의 근절을 요청해야 한다.

#### 7. 대북 인도적 지원의 요청

현재 세계에서 일본만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납치문제와 연계시키고 모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나, 평화 화해의 ‘동북아시아’를 열기 위해 정치와 인도적 지원의 분리, 인도적 지원의 즉각 재개를 요청해야 한다.

#### 8. 일본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상기

‘동북아시아’를 열기 위해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청산이 전제가 됨을 상기 시켜야 한다. 야스쿠니신사참배, 교과서 문제가 일본과 동북아 여러 나라와의 신뢰양성의 걸림돌이 되어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 9. 변영의 ‘동북아시아’의 제안

일본을 비롯하여 동북아 지역에 드리우고 있는 불황의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의 평화롭고 안정된 경제활동기반의 조성, 개혁 개방정책의 증진, 상호 교류 협력의 당위성을 상기시키고, 남북철도·교통연결을 통해 시베리아 ‘대륙 교량’(Land

Bridge)의 완성 구상에 대한 일본의 동참을 촉구해야 한다.

### 10. ‘환 동해(일본해)시대’ 실현을 위한 적극지원표명

일본의 불황이 지속되어 특히 동해 쪽의 개발 후진지역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관심표명은 지역활성화라는 새 정부의 철학과 합치되고,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북, 일본, 러시아, 중국의 공동 번영과 교류의 길을 열고 지역 안정에도 공헌한다. 또한 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터 ‘환 동해(일본해)시대’ 실현을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 등을 통해 많은 연구를 축적해왔으므로, 새 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의 유력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토 론>

## 서승, “일본의 극우화와 동북아의 평화 — 한국의 선택”에 대한 토론

김창록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서승 교수님의 발표에는,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활동가의 입장에서 예리한 분석과, 일본 안에서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在日코리언의 입장에서 심각한 경고 내지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서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는 일본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한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공유되어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의 ‘극우화’는 특별히 주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2. 일본의 헌법사를 공부하고 있는 토론자의 입장에서 코이즈미 준이찌로오(小泉純一郎) 총리가 최근 개헌을 향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특별히 주목됩니다.

일본에서는, 1946년에 미국의 압력에 의해 이른바 ‘평화헌법’을 받아들인 후, 20세기말까지 크게 세 차례의 개헌 시도가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에 따라 일본이 연합국의 점령에서 해방되어 독립한 직후의 시도이고, 두번째는 1980년대 중반 경제대국화를 배경으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당시 총리가 이른바 ‘전후 정치 총결산’을 내걸던 때의 시도이며, 세번째는 1990년대에 들어와 제1차 페르시아만 전쟁 이후 이른바 ‘국제협조’가 외쳐지던 때의 시도입니다.

서 교수님의 발표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들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첫째 미국이 견제했다는 점, 둘째 일본의 호헌세력의 노력과 경제성장에 따르는 일본인들의 현실안주적 성향 때문에 개헌세력이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 셋째 일본의 침략과 강점으로 고통받은, 한국·북한·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국가들이 일본의 우경화에 저항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미국의 견제는, 이미 냉전 초기부터 미국이 「일본국헌법」 9조의 개정을 일본에게 요구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애당초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일본 내부의 사정은 지난 10여년간의 경제 불황 속에서 일본 사회 전반이 우경화로 치닫는 상황에서 제약요인으로서의 의미를 크게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국가들의 저항 또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인 현재, 일본의 우익은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환경 속에서 개헌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이즈미 총리가 2005년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 그러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토론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의 개헌추진의 역사는 일본 내부의 변수보다는 외부의 변수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변수 중에서 동아시아국가들의 저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역사적으로 되짚어 보면, 천황이 ‘살아있는 신(現人神)’에서 ‘상징’으로 전락하게 되고, 군대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회한한’ 나라가 출현하게 된 것은, 일본이 동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강점에 대해 저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으로 침략과 강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침략과 강점을 추진한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체제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선전할 필요가 있었고, 그 때문에 ‘상징천황’과 ‘전쟁포기’라고 하는 그럴듯한 외피를 만들어 내게 된 것입니다. 60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거둬드는 개헌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결국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또한, 침략과 강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그것을 덮어 가리고 있던 외피를 제거하려는 데 대해 침략과 강점의 피해를 입은 동아시아국가들이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개헌에 대해 생각할 때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원칙적으로는 개헌은 한 나라 내부의 일입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막강한 국군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군대를 가지는 쪽으로 개헌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문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일본의 개헌 문제도 그것이 자리잡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은 왜 ‘상징천황’과 ‘전쟁포기’라는 독특한 내용의 헌법을 가지게 되었으며, 60년이 가까워오는 오랜 세월동안 개헌을 이루어내지 못했는가를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위의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라볼 때, 여전히 동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강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일본이, 면피용으로 내건 ‘상징천황’과 ‘전쟁포기’를 폐기한다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아시아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책임 추구를 하지 못한 가운데 침략과 강점을 자행했던 바로 그 일본을 다시 이웃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동아시아국가들이 개헌을 향해 내달리는 일본의 우경화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서 교수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동아시아의 인권·평화 운동이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는 한국인·중국인 등에 의해 일본에서 제기되어 그 중 다수가 현재도 진행 중인 70여건의 과거청산소송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 소송의 대다수가 원고 패소 판결로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젊은 판사들이 담당하는 하급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여년에 걸친 피해자들의 지난한 노력이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일본의 판사들을 ‘회개’시킨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인권 운동 그리고 과거청산 운동이 일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마침 2년 후가 되면 을사조약 100주년, 광복 60주년, 한일협정 40주년이 됩니다. 대일 과거청산을 위해 매우 의미 깊은 해를 앞두고 한국 내의 시민운동단체들은 여러가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아시아 전체의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해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는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서 교수님의 발표문에도 나오듯이 북한은 일본의 우경화의 핑계 내지는 구실로서 동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악의적’ 동원에 군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핑계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북한 자신 또한 그에 대해 일정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아시아의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만, 그러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할지에 대해 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